

시론



김희준

법무법인 LKB&Partners 대표변호사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고위 공무원 또는 주요 공직에 대한 인사시즌이 되면 주요 후보자들에 대한 하마평이 언론에 오르내린다. 최근에도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설이 돌면서 특정 인사들이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인사 때마다 언론에서는 주요 후보자들을 금융통, 경제통 등 '무슨 통'이라고 표현하면서 특정분야의 전문가로 보도한다.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은 그가 거쳐 온 보직이다. 즉 어떠한 보직을 거쳤으므로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식으로 설명한다. 검찰인사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에서는 검찰 인사 때마다 주로 거쳐 온 보직을 기준으로 특수통, 금융통, 강력통, 공안통 등으로 검사들을 분류하면서 각 보직의 후보자들을 거론한다. 심지어는 특수부나 공안부에 단 한번

통통통 대한민국

만 근무했음에도 특수통, 공안통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인사결과가 발표되면 보직경로 중 그 분야를 근무한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분야의 '통'이라는 식으로 깎아 맞추기식 보도를 하기도 한다. 국민들은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기 어려워 언론보도나 정부발표만 보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식의 평가와 인사가 타당한 것일까? 어떤 보직을 거친 것만으로 또는 어떤 분야에서 일한 경험만으로 '무슨 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분야의 전문가로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어떤 단계에서 활동했다는 것만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필자는 이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어떤 보직을 거쳤거나 어떤 분야에서 일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사람이 그 보직에 있으면서 얼마나 제대로 일을 했는지 여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보직에 운이 좋거나 어떠한 힘을 동원해 근무한 경험 있으면 그 탄력으로 근무처를 옮기더라도 그 분야에서 계속해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근무처의 인사권자는 그 사람의 구체적 업무실적을 알기 어려우므로 이전에 어떤 분야에서 근무를 하였는

지를 기준으로 전문성을 파악하게 된다. 필자가 검찰에 근무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검사 인사이드가 있으면 각 청에서는 형사부, 특수부, 그 분야의 '통'이라는 식으로 깎아 맞추기식 보도를 하기도 한다. 국민들은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기 어려워 언론보도나 정부발표만 보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주요보직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상 일을 거의 하지 않았거나 일을 했는데도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분야는 그에게 맞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행했던 업무가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으면서 더 고위직이나 더 좋은 보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검찰의 경우도 어느 순간에서부터 무죄가 선고돼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이익이 집중한 사건일수록 더욱 그런 경향

이 뚜렷하다. 책임을 지기는 커녕 실패한 수사를 했음에도 특수통 내지 공안통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검사들이 선호하는 해당 부서에 계속 배치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는 수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재판관응을 하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인생이 폐쇄되었음에도 그에 대해 실제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법원과의 견해차이 정도로 그냥 넘어간다. 이러한 행태가 잘못되었음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전문성과 실력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 사람의 구체적인 업무실적과 실제 일을 함께 해본 사람들의 평가다.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냉철하게 분석해봐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실력과 전문성을 판단하고 선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언론에서도 보직경로보다는 구체적인 업무실적을 기반으로 과연 '통'이 맞는지 판단하고 보도해야 한다. 실패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함부로 '통'이라고 홍보해 주어서는 안 된다. 현재 각 부처의 수장들에 대한 인사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제대로 된 '통'을 잘 선발해 보다 미래지향적이면서 발전적이고 활기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社說

경전선 전철화 통해 동서화합 전기마련 해야

지난해 근소한 차이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경전선 광주-순천구간의 고속전철화 사업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광주·전남 여야 국회의원 19명은 최근 국회에서 공동토론회를 열고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의 추진동력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올해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돼 예타를 다시 착수하게 되면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는 논리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박사는 "기존의 경전선을 남부 연결(목포 또는 광주-부산) 철도 노선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벗어나 영호남 연결선으로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2019년 예타면제 철도사업과 상관성을 기반으로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경전선 구간을 재조명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소외'의 상징으로 점철된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구간은 개통 이후 한 번도 개량되지 않은 단선 비 전철 구간으로 남게 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고속전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지난해 4년 9개월이나 끌어온 예비타당성 조사가 0.85의 높은 경제성 분석(B/C)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 계층분석법(AHP)에서 근소한 차이(0.011)로 심사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부산까지 하루 한 차례 운행하는 열차는 무려 5시간30분이 걸리고, 광주-순천 구간은 비탈과 굴곡이 심하다 보니 오르막에서 차륜공진이 발생하고 내리막 구간에서는 자연정차에 따른 운행장애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안전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전철화 되면 광주-부산 철도 소요시간은 현재 5시간30분에서 3시간 이상 단축된 2시간대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호남권과 영남권의 활발한 교류로 균형발전은 물론 영호남 화합, 남해권 성장동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균형발전과 경전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결단이 요구된다. 속도경쟁 시대에 경전선이 동서교류의 중심축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결정이 확정돼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나주 SRF 분쟁 거버넌스 결정 수용 환영

주민 반발로 시험가동이 중단된 나주 SRF(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시설이 민관거버넌스의 중재로 분쟁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인데 시험가동 3개월 만에 환경 유해성을 우려하는 나주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가동이 중지돼 왔다. 이에 앞서 광주 SRF 시설 사업자인 청정빛고을㈜과 나주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협약을 맺고 광주에서 만든 SRF를 1t당 1만8천원에 전량(일 300t) 매입하기로 했다.

광주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쓰레기는 2017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것을 제외하고 모두 광주 양과동 SRF 제조시설에서 고�형연료로 전환됐다.

하지만 SRF 제조시설이 멈춰 SRF 생산을 못하게 되자 양과동 위생매립장의 쓰레기 매립량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멈춘 이후 지난해 1월까지 광주 SRF 시설에서 생산한 고�형연료 6만7천여t을 장성의 한 물류창고 야적장에 임시 보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연간 70~80억원을 투

입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청정빛고을은 공장이 멈추자 별다른 수익이 없어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

현재로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에서 광주의 SRF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광주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다행스럽게도 나주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이 고�형폐기물(SRF) 민관거버넌스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환경 유해성 평가를 위한 발전소 시험가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 시험가동과 환경 유해성 평가, 주민 수용성 조사 방식에 대한 기존 합의안이 있는 만큼 후속 절차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험가동을 해야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유해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 투표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른 7월중 시험가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쓰레기 처리는 인간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위생문제로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민관거버넌스가 유해성 검증을 위한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해 나주 열병합발전소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

그래픽 뉴스

6월 기업 체감경기 1p 오른 74...3월 이후 회복세

기업 체감경기가 이달 들어 소폭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9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이달 전(준) 산업의 업황 BSI는 전월보다 1포인트 오른 74를 나타냈다. BSI는 기업가들이 체감하는 경기동향 및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경기판단지표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보다 많다는 의미다.

전 산업 업황 BSI는 올해 1-2월 69까지 빠졌다가 3월 73으로 올라선 뒤 73~74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업황 BSI가 1포인트 하락한 75를 나타냈다.

세부 산업별로는 조선·기타운수(88)가 앞서 수주했던 선박 건조물량의 증가로 전월 대비 20포인트 올랐다. 여전히 부정적 응답 비중이 컸지만 지수 수준은 2011년 7월(90)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기타기계·장비(68)와 전기장비(68)는 설비투자 부진 등 여파로 각각 6포인트, 8포인트 하락했고, 식료품(77)과 섬유(57)의 하락 폭도 각각 7포인트, 9포인트로 컸다. 제조업체를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79)은 3포인트 내렸고, 중소기업(70)은 1포인트 올랐다. 형태별로는 수출기업(80)이 3포인트 하락했고, 내수기업(71)이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74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올랐다. 예술·스포츠·여가(78)가 7포인트 하락했으나, 전문·과학·기술(87), 부동산업(73)이 각각 18포인트, 12포인트 올랐다. /연합뉴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추이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1618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취부 650-2030 체육 650-2065 광고 650-2072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사회부 650-2040 시설실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실무국 650-2020
FAX 편집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가)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문화난장



홍인하

전 광주시의원, 국제학박사

엊그제, 26일은 아주 뜻 깊은 날이었다. 서서평선교사(1880-1934) 85주기, 허철선 선교사(1936-2017) 2주기 되는 날이었다. 평생 조명을 받지 못하다가 내한 1백년 만에 서서평선교사 오월어머니상을 받고 돌아가신 뒤에야 알려진 허철선 선교사는 두 분다 한국에서 20여년을 사셨다. 두 분 모두 한국에 선한 영향력을 발한 사람들이다. 서서평은 1880년 독일에서 미혼 교사의 딸로 태어나 남장로교 간호선 교사로 1912년 한국에 도착해 제중 병원에 근무했다. 부리밭에 된장국을 먹고 발이 커서 남자고무신을 신고 다닌 독신간호사였다. 결핵환자

와 나병환자와 빈민을 돌보았고 이 일학교와 부인조력회 등을 통해 여성에게 이름을 지어줬고 불우여성들을 위해 숙식, 교육, 진료까지 책임지는 자기희생적인 삶을 살았다. 그야말로 한국여성운동의 선구자다. 13명의 불우한 소녀를 자신의 딸로 입양했고 병원에서 분만하다 산모(남편은 나병환자)가 사망해 고아가된 요셉을 친아들로 양육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는 좌우명을 삼으로 증명했다. 1934년 6월 서서평은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숨을 거뒀다.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 장, 동전 7전, 강냉이가루 2홉뿐이었다. 시신도 유언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 됐다. 그 당시 동아일보 최원순 광주지국장등 '자선과 교육 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 양 서거'라는 제목과 '재생한 예수'를 부제로 그녀의 죽음을 대서특필했다. 조선에 머물렀던 22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줬던 삶

이었다. 그가 한국에 온 지 100년 되던 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서서평을 존경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는 이방인이고 선교사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광주의 어머니였다. 서서평선교사의 삶은 결코 성공이 아닌 섬김의 이었다.

허철선 역시 기독교병원 원목으로 호남신학교에서 상담학을 강의하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한 공격으로 기독교병원의 환자들이 현관까지 넘쳐날 때 그 참담한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해 세계에 알리는 공헌을 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사택에 암실도 유언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 됐다. 그 당시 동아일보 최원순 광주지국장등 '자선과 교육 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 양 서거'라는 제목과 '재생한 예수'를 부제로 그녀의 죽음을 대서특필했다. 조선에 머물렀던 22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줬던 삶

의 가슴을 울격하게 했다. 더 높아지려하고 더 옮겨지려하며 더 빼앗으려는 세상에 이웃이 겪는 아픔, 이 세상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한알의 밀알이 돼 살아가는 서서평, 허철선 두 분의 고귀한 사랑과 섬김 앞에 그 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지난 26일 서서평 허철선 선교사 추모 예배를 드렸다.

서서평 선교사와 허철선 선교사가 광주에서 행했던 사랑은 오늘날 다시 살아나 광주의 빛이 되고 있다. 두 분 선교사의 삶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빛과 열매를 꿈꾸게 할 것이다.

필자 역시 그들의 삶을 본받고자 한다. 양립 선교교원을 오르내리며 고아(정소년), 과부(여성), 나그네(고려인, 외국인근로자, 이주민 등)로 지칭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함께 할 것을 다짐해본다.

현장칼럼



김성배

광주시 회계과장

공공조달은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인가를 구매한다는 점에서 민간과 공공의 영역은 동일하지만 추구하는 가치에 차이가 있다. 기업이냐 개인들은 품질 좋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반면 공공조달 계약은 경제성과 함께 '공공복리'라는 공익적이며 사회적인 가치를 고려한다. 비슷한 품질이라면 대기업 제품을 선택하기보다 지역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 이러한 가치 추구는 계약 과정에 고스란히 담기게 된다. 입찰공고 후 실질적이나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

공공조달에서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적격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수익계약 예외의 사항을 두고 심사과정에서 신인도 가점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그러한 취지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인 수익계약은 2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여성기업과 장애인·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수익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영세업체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다.

공공 계약분야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은 2012년 사회적가치법을 제정해 행정기관이 조달계약 상대자를 선정할 때 지역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매년 약 2억 파운드(약 3천억원)의 예산을 공공조달에 지출하고 있는 런던시는 10만 파운드(약 1억5천만원) 이상의 계약에 대한 '핵

심조달 정책'을 2016년부터 의무 적용하고 있다. 공공조달의 경제성보다는 사회적 가치 극대화를 최대 목표로 여긴다. 소수민족과의 협업정도, 급여의 적정여부,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한 기여도 등을 중요 평가 지표로 설정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 부문에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담으려는 노력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창업·벤처기업이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제품 및 현장테스트 협력 제품에 대해 수익계약이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령을 개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공공기관 일자리 부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요한 '민선7기 사회적경제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함한 민·관거버넌스협의회를 구성, 시 산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연계사업을 발굴해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조달 부문에서는 광주시는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7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7년 이내 중소기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을 독려함으로써 신규기업이 선배기업의 기술력을 전수 받고 보다 많은 공공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규 채용이 많은 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우수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을 받게 된다. 실적과 경영상태의 부족한 점수를 보완해 사업 참여기회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요즘 현명한 개인 소비자들은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착한 소비를 실천한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자를 구입하는 '착한 공적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인권·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만병통치약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모두가 풍요로운 광주가 만들어지길 기원해 본다.